

투표당원 줄이고 전대 장소 분산…반대파 “합당 위한 꼼수” 반발

국민의당 당무위 당규 개정

국민의당은 1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2·4 임시 전당대회' 안전인 바른정당과의 합당 투표 자격과 관련, 그동안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당규를 개정했다. 국민의당은 또한 이번 전당대회를 전국 시도당에서 분산해서 동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당규를 바꿨다.

통합찬성파 측은 당규 개정으로 '기존 1만여명의 대표 당원이 서울 1곳서 치렀던 전대'를, 2·4 전대에서는 이보다 대폭 줄어든 대표 당원이 전국 23곳에서 동시에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담하며 전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통합 반대파측은 이에 대해 투표권을

당무위 권한 최고위 일임 의결

이상돈 의장 배제는 결론 못내

반대파 개혁신당 창당 실무회의

가진 대표당원의 전체 숫자를 줄이고 전대를 분산 개최해 의결 정족수를 쉽게 채우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판을 내놓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물론, 대표당원으로 선출된 이후 월 1000원 이상의 당비 납부 의무를 1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표당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는 그동안 1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가운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당원의 경우 추가로 대표당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또 이번 전당대회를 전국 각 시도당에서 분산해서 동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도 도입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당규 개정을 통해 전준위 측은 기존에 1곳에서 치렀던 전대를 이번에는 총 23곳에서 동시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당원들의 출석률을 높여 의결 정족수를 더 쉽게 채우기 위한 방안이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당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최고위 회의에 일임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최근

당무위에 대해 반대파의 반발이 심해지는 만큼 안 대표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최고위에서 전대 준비를 주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무위는 그러나 그간 뜨거운 쟁점으로 꼽혔던 이상돈 전대 의장의 사회권 조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통합찬성파 측은 그간 이상돈 전대 의장이 통합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전대 소집 공고 또는 전대 개최 자체를 하지 않거나 전대 개최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등 전대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기획조정국과 법률위원회는 전대 의장 사회권 문제에 대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으로, 추후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통합찬성파 측은 당 법률위원회 검토 후 오는 18일께 또다시 당무위를 열어 전대 의장 사회권 조정 등 이상돈 의장 배제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무위 의결사항에 대해 통합반대파 측은 "전대에서 합당한 통과를 더 손쉽게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강력 반발했다. 통합반대파 의원들도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조배숙 위원장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대표당원의 모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각 지역에서 분산투표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전 대표는 YTN라디오에 나와 "이번 전당대회는 전두환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을 만들어서 행한 체육관 선거와 똑같다"며 "안철수의

새정치가 가장 구태이자 썩은 정치가 돼 버렸다"고 맹비난했다.

통합 찬반 진영 사이에서 갈등 증대에 나섰던 중립파 의원들도 통합찬성파의 잇따른 밀어붙이기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중립파 의원들의 경우 파국만은 막아야한다는 생각으로 양측 중재에 나섰는데 안 대표 측이 잇따라 2·4 전대 관철을 위해 국민과 당원 눈을 의식하지 않고 무리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끓으면서다.

한편 통합반대파는 이날 '개혁신당' 창당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여는 등 안 대표의 합당 추진에 맞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17일에는 전북 전주교대에서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세몰이에도 나선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北예술단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 파견

남북 실무접촉서 합의…내일 차관급 실무회담

남북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을 17일 오전 10시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북측은 이 회의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제시했다. 우리 측은 전해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을 북측에 통제한 바 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북측 방문단의 방남 경로, 체류비 부담 원칙, 개회식 공동입장 여부 등 논의해야 할 의제가 적지 않다.

우선 북측 방문단이 어떤 경로로 방남(訪南)할지가 관심사 중 하나다. 북한은 지난 9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참관단 등을 평창올림픽 기간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당시 방문단 규모를 400~500명 정도로 우리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측 방문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육로 방남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로를 이용하면 우선 평양에서 파주로 내려와 평창으로 가는 노선이 있다. 철도·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대규모 출·입경 시설이 있어 편리하다. 북측 선수단 등이 마식령스키장에서 발대식을 하고 올 경우 연 인근의 원산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내려 수도 있다. 체류비 부담 원칙도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남측이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여러 차례 의사를 밝힌 대로 북측 선수단의 참가비용

은 부담할 수 있지만 나머지 방문단까지 도맡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대개 남북협력기금에서 북측 방문단의 체류비를 지원해왔으나 국제사회의 총출한 대북제재가 가동 중인 상황에 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남북은 15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과 관련해 실무접촉을 갖고 올림픽 기간에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북측 예술단은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실무접촉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남북은 "북측 예술단의 공연 장소,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고, 관련하여 북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공동보도문에 전했다.

아울러 남측은 북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으며, 기타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철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지용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한종욱 통일부 과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을 단장으로 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이 시작된 15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우리측 수석 대표인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북측 단장인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 등 양측 대표단이 회의 전 한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도종환 장관 “평창 남북 공동입장뎀 한반도기 사용”

“단일팀 구성 우리 선수 배제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할 경우,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개막식 때 공동입장이 합의되면 한반도기를 들게 되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우리가 주최국인데 왜 태극기를 들지 않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

회 때도 우리가 주최국이지만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었다”며 “지금까지 9번 정도 공동 입장한 경험이 있고, 체육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도 장관은 “개막식 전체 행사가 진행되는 초기에는 대형 태극기가 등장하고 경기마다 입장하면 태극기가 올라가게 된다”며 “오는 2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이 세세한 부분을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극기와 안공기를 다 들고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는 말도 (20일 IOC 회의 때)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되면 우리 선수들의 출전권이 박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 선수들이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 장관은 “보통 단일팀은 5대5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선수 23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23명 플러스알파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라며 “선수교체가 자주 이뤄지는 아이스하키의 특성상 우리 선수들이 출전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선수들과 상의

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감독권을 저희가 가져오는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우리 감독이 북한 선수를 받아서 어느 경기에 어떻게 교체하면서 운영할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겨 및 봅슬레이 남북 단일팀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도 장관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봅슬레이연맹에 등록된 북한 선수가 없다”고 밝히며 이어 “피겨 페어 팀 단일팀 문제는 저희 자체로도 논의된 바가 없고, 20일 IOC(와 남북간) 회의에서도 단일팀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해(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